



지난 11월 9일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사위로 회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에 원자력이 녹색 성장 정책에 상충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당초 정부제출안 제49조 “원자력산업 육성”을 포함한 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상태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학회에서는 11월 12일 최고자문회의 및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건의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정부(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기후변화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대한 원자력계의 건의

한국원자력학회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조항이 전격 삭제된 것에 대하여 원자력계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원안대로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화석 연료의 수급 불안정과 지구 환경의 당면 과제인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해 원자력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일본의 「Cool Earth 50」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및 미국 플로리다주의 청정 에너지 사업에 각각 원자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에서 원자력은 지난 30년간 싸고 깨끗한 에너지로서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어왔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아래 원자력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안전 운영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원자력 적정 비



중 유지, 원자력산업 육성 등의 규정들을 법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준국산 에너지이며 청정 에너지로서 원자력이 국내 산업에 기여한 바와 또한 미래 수출 산업으로써 원자력의 가능성이 올바르게 평가된 결과이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한 지난 11월 9일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 심의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원자력이 상충된다는 일부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자력산업 육성 관련 조항들이 전격 삭제된 대안이 가결되었다.

녹색 성장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큰 원자력을 배제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2020년까지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녹색 성장의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녹색 성장의 궁극적인 비전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인데, 원자력계가 온 힘을 모아 추진중인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면 녹색 성장의 목표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국민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으로 국가의 앞날을 열어 주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인정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원자력계는 금번 법안 심의 과정에 보여줬던 정부 및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정책적 지원을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원자력을 배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원자력산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와 철학이 없는 졸속적 처리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대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원자력의 역할 확대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자력 부분을 원안대로 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

※ 정부도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법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